

주 4.5일 일하고 코스피 5000 가겠다는 ‘마법’

광화문·부

김 신 영

경제부 차장



승차 공유 회사인 ‘우버’가 로보(무인) 택시 2만대를 주문해 미국 도시에 배치를 시작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전 기차는 미국 기업 ‘무시드’, 자율 주행 기술은 스타트업 ‘누로’에 각각 수익 달라씩을 주고 사서 쓴다고 한다. 우버를 포함한 모두 창업한 지 20년이 안 된 회사들이다.

한국은 택시 기사들의 반발에 동조한 국회가 2020년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제정해 우버 같은 승차 공유를 원천적으로 틀어막았다. 승차 공유가 큰 부가 가치를 만들어낼 자율 주행 무인차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당시 전문가들이 예고한 상태였지만, 정치인들이 눈앞의 ‘한 표’에 굴복했다. 현재 우버의 시가 총액은 코스피 2위인 SK하이닉스의 1.3배 수준이다. 유튜브에선 웨이모(구글), 바이두 등의 로보 택시가 미국과 중국의 거리를 오가는 동영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판 세상 풍경 같다.

지난달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가시적 단기 성과로 주식시장 상승을 언급한다. 실제로 코스피는 3000에 이어 3200선을 빠르게 넘었고 조만간 최고점도 경신할 전망이다. 이사회 역할 재정립, 일반 주주의 권리 보호 등을 통해 그동안 한국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아온 ‘코리

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투자자들이 호응한 결과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5000’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달성되길 바란다. 그런데 그다음은 무엇이어야 할까. 최근 만난 한 투자 전문가는 말했다. “주가는 결국 혁신하는 기업이 끌어올립니다. 이익 단체를 설득 못 해 우버 하나 못 하게 막는 나라, 돈 잘 버는 기업은 단죄의 대상으로 보는 한국이 5000 그다음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 대통령은 반기업 정서를 버리고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펴겠다고 한다. 하지만 잇달아 나오는 정책들은 반례(反例)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인 AI에 정부는 1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한편으론 AI 등 테크 업계가 산업의 특성상 유연하게 적용해달라고 거듭 요청해온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무시간을 주 4.5일제, 혹은 주 48시간 근무제로 더 줄이게 거꾸로 가고 있다. 입법

에 이미 속도가 붙었다. 여당은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회사가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다음 달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다.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신임 기획재정부 장관의 계획은 이재명 정권이 홍보

해온 주주 권의 보호와 충돌한다. 주식투자의 성공 여부는 주가가 얼마나 오를냐, 배당을 얼마나 많이 받나 이 두 가지로 결정된다. 배당은 번 돈에서 비용 쓰고 이자·세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한다. 법인세가 오르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배당 적게 주는 기업은 주가도 내려가기 마련이다.

정부가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법인세 인상을 왜 들고나왔을까. 이 대통령의 과거 글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다. 2022년 5월 나온 책에 복지 예산 총당 방안을 언급하며 쓴 대목이다. “대기업에 현재 부과하고 있는 법인세 20%를 30%로 인상하면 연평균 15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참고로 미국은 35%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기업에서 돈을 거둬서 ‘기본 사회’에 쓰겠다는 단순 논리였다. 얼핏 들으면 그런 가산을 수 있지만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투자·고용·배당 여력을 줄이는 등 부작용이 커서 대부분 나라가 쉽게 손대지 않는 정책이다.(참고로 미국의 연방 법인세율은 2018년 21%로 내려간 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최근 증시 ‘밸류업’의 모범 사례로 종종 대만이 거론된다. 대만인인 왕수봉 이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만 증시의 숨은 동력은 기업이 마음껏 사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기업과 ‘윈윈’이 되어 함께 뛰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라고 했다. 한국은 어떤가. ‘코스피 5000’이란 목표와 기업을 옥죄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는 모순된 현실의 종착점은 어디일지 궁금하다.

우정아와 아트 스토리 [591]

낮과 밤의 공존

조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René Magritte·1898~1967)의 ‘빛의 제국’에는 낮과 밤이 공존한다. 거리는 창백한 가로등 하나를 빼고는 온통 어둠에 잠겼다. 굳게 닫힌 건물에서 노르스름한 불빛을 밝힌 창이 둘 보인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환한 낮이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동실동실 떠다닌다. 마그리트는 ‘빛의 제국’을 유화로 만 17점 그렸을 정도로 이 주제에 매료됐다. 더 정확히 말해서 그는 밤과 낮이라는 두 상반된 상태를 모두 좋아했다.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없었다고 했다.

마그리트는 이처럼 익숙한 현실의 사물을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맥락에 배치해서 일상을 낯설거나 충격적으로 만들었다. 이 기법을 ‘데페이즈망’이라고 불렀다. 글자 그대로는 ‘고향에서 벗어나는’ 뜻이다. 비현실적 상황에 놓이면 마치 ‘고향을 떠난 듯’ 이상하고 불안한 정서를 느끼는 것과 같다. 하지만 고향을 떠났다고 모두가 항상 불안하기만 한 건 아니다. 낯선 풍경은 오히려 신선하고, 익숙한 환경

에서 벗어나면 삶에 활기가 생기며, 멀리 떨어져 봐야 고향의 실체도 바로 보인다.

‘빛의 제국’은 보기에 신비롭고 아름다울 뿐 아니라 마음에 안식을 주기도 한다. 어둠 속에 갇힌 이들에게는 저 너머에 빛이 있으리라는 믿음을 준다. 눈부신 대낮이 버거운 이들에게는 안락한 그림자에 머물 용기를 준다. 마그리트는 이렇게 낮과 밤, 이성과 감성, 현실과 환상의 세계를 함께 보는 능력을 ‘시(詩)’라고 불렀다. 그의 시는 낮과 밤, 빛과 어둠이 처음부터 그렇게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둘 사이의 경계는 애초에 흐릿했고, 우리는 그 틈에서 살아간다.



르네 마그리트, 빛의 제국, 1953~1954년, 캔버스에 유채, 195.4×131.2cm, 베네치아 페기 구겐하임 컬렉션.

포스텍 교수·서양미술사

社 説

북 주민 유일 외부 통로 대북 방송, 50년 만에 꺼졌다

국가정보원이 최근 대북 라디오·TV 방송을 모두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의 대북 방송은 자체 설비로 한다. 라디오는 북한 전역, TV는 신의주~원산 권역에 닿는다고 한다. 미군 방송을 1970년대 이어받은 이후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때도 중단된 적이 없다. 방송 시간 단축과 내용 조정 정도만 있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대북 확성기 중지와 대북 전단 단속에 이어 국정원의 대북 방송까지 꺼버린 것이다.

탈북민 상당수는 저마다 대북 방송의 추억을 갖고 있다. 대북 방송을 통한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자유세계의 소식을 눈이 열렸고 ‘인권’과 ‘자유’라는 말도 그 뜻을 알게 됐다. 대북 방송을 몰래 듣다가 수용소로 끌려가는 위험을 무릅쓰고도 방송을 놓지 못했다. 확성기 방송과 전단이 사라진 지금 북 주민이 외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대북 방송이었다. 국정원이 대북 방송마저 중단하면 북 주민은 무엇으로 외부의 소식을 듣고 진실을 알 수 있겠나.

한 탈북민은 북에서 이북을 뒤집어쓰고 대북 방송을 들었고 탈출에 성공한 뒤 대북 방송을 한 번을 은인이라며 찾아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감시 왕조에 대한 비판보다는 세상을 보여주는 사람

사는 이야기, 연속극, 심지어는 일기에도 같은 것에 더 마음이 끌렸다고 한다. 한국 드라마 요약본만 보고서도 자신들이 속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김정은은 2020년 말 주민들에게 번지는 한류를 막으려고 ‘반동사상배격법’을 만들었다.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퍼뜨리면 감옥에 보내고 죽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때부터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란 이름을 쓰며 외국처럼 만들려 했다. 북 주민의 탈출을 막고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북·중 국경 1400km를 전부 철조망으로 막고 지뢰를 설치하기도 했다. 대북 방송마저 꺼지면 북 주민에게 비치던 한 줄기 작은 빛마저 사라진다.

노무현 정부 때 북은 대북 방송 중단을 요구해 왔다. 당시 국정원은 대북 방송이 평화 통일이란 헌법 책무를 이행하고 북 내부 변화를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며 중단을 막았다. 지금 북 주민이 처한 현실은 20년 전보다 대북 방송이 더 필요하다. 새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북에 선물을 계속 주고 있다. 이제는 북한 주민의 유일 외부 통로까지 차단해 김정은을 돕고 있다. 이것으로 북 주민들에게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야 한다.

갑질 장관 임명, 乙 위한 ‘을지로썸’라도 폐지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들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당시 여가부에도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강 후보자가 국회 여가위원이던 2021년 지역구에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인 ‘해바라기 센터’ 설치를 요구했으나 여가부가 어렵다고 하자, 그와 관련 없는 여가부 다른 예산을 삭감해 버렸다는 것이다. 이를 공개한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은 “부처 장관에게도 지역구 민원 해결 못 했다고 갑질을 하는 의원을 여가부 장관으로 보낸다니 기가 막힌다”고 했다. 정 전 장관은 “강 후보자가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고 화를 냈다”며 “결국 강 의원의실에 가서 사과하고 예산을 살렸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의원실 보좌진에게 자기 집 번기 수리, 쓰레기 버리기 등을 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이 맡게 될 부처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추가됐다. 우리 사회의 소수, 약자들을 위한 부서의 장이 될 수 있겠나.

그런데도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강 후보자 임명을 관찰할 태세다. 우상호 정부수석은 “국민의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했고,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인사청문 보고서를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대변인은 “갑질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라며 전직 보좌진이 문제일 수도 있다며 2차 가해를 했다.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표방해온 당이다. 12년 전부터 당내에 ‘을지로위원회’란 기구를 만들어 을(乙)의 목소리를 듣고 갑질을 근절하겠다고 해왔다. 현재 이 위원회에 소속된 민주당 의원만 100명가량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을지로위원회가 “민주당의 정체성”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최소한 을지로위원회는 문을 닫는 게 옳다. 그렇지 않으면 을지로위는 희극이 되지 않겠나.

관세 협상 시한 압박, 미국에 명분 줄 필요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8월 1일까지 10여 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때까지 협상을 매듭짓지 못하면 25%의 상호 관세가 부여돼 우리 기업들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수 있다. 그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돼 관세 문제와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 현안을 일괄 타결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그러나 이달 초 국가안보실장이 미 국무장관을 만나 정상회담을 요청했지만 확답을 얻지 못했다. 안보실장이 11일 만에 다시 미국을 방문한 것도 관세 협상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을 다시 조율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7월 중에 한미 정상회담 개최는 어려워졌지만 일정을 확정하기만 해도 대미 협상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정부는 장관급 채널을 동시다발적으로 가동해 협상의 실마리를 풀려 하고 있다. 기재부·산업부·외교부 장관이 미국 측 카운터파트와 회담을 위해 미국 방문을 조율하고 있다. 야당이 여러 의회에 도 장관 임명에 협조해준 것도 이들이 하루라도 빨리 협상 전선에 뛰어들어 성과를 내라는 취지였다. 한미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도 미국을 방문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동시에 총력전을 벌여야 할 국면이다.

정부는 국방비 증액 등을 제시하며 일괄 타결을 추진하고 있지

만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만 겪는 문제는 아니다. 일본, 대만 등 주변국들도 이번 주 경제 장관과 부총리를 미국에 보내 관세 협상에 나선다.

미국은 쌀·소고기 추가 개방과 40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 운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니 미 상무장관은 21일 “경제를 개방할 준비가 돼 있다면 더 좋은 관세 협정을 맺겠지만 비관세 장벽을 유지한다면 관세를 내는 게 공평하다”고 했다. 관세 협상의 이면엔 농산물 개방 요구가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관세 협상이 미국에 마냥 유리한 것도 아니다. 제조업 기반이 없는 미국은 세계와 무역을 하지 않으면 미국 소비자들의 생활은 물론 경제 활동도 보장하기 어렵다. 미국이 원하는 비관세 장벽의 숨통을 트워 미국에 명분을 주면 의외로 일이 풀릴 가능성도 있다. 우리 입장에서 쌀, 소고기 등을 지켜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클 수 있다.

잘만 하면 어려운 협상이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킬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국내 정파를 떠나 한미 대통령 간의 상호 신뢰는 국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다.

이승만
서거 60주기

이승만은 독재자? ... 아니! 대한민국 설계·시공·보수, 위대한 대통령!

우남 노선, 오늘날 대한민국 만든다 | 김일성 노선, 《김씨조선》 지옥 구축 | 《이씨조선》, 한반도 북부에 변신 재림 | 평양 것들, 《이승만 악마화 프레임》 총력 경주

《이승만 악마화》 프레임 2개

7월 19일은 《대한민국을 설계하고, 세우고, 지키고, 가꾼 위대한 거인》 우남 이승만 대통령 서거 60주기. 그가 도입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본주의》 두 날개는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거쳐 선진국으로 날아올랐다.

1945년 해방 뒤 우남 노선 대신 《남한 내 좌파 + 중랑파 기회주의 연합정권》이 나왔다면, 김일성의 먹잇감이 되었을 것. 우남과 김일성, 두 노선 사이에 《중간》은 없었다.

우남의 설계는 《이씨조선》 500년 노예사회, 썩어 문드러진 그 질곡의 쇠사슬을 끊어냈다. 《근대화》와 《서방 해양문명 편입》을 성공시켰다.

김일성의 북한은 《소련·중공의 전체주의·공산주의 + 일본의 천황제 군국주의 + 이씨 조선 가부장적 유교 전체주의》라는 잡종 교배 지옥 사회로 귀결됐다. 《이씨조선》이 평양에 《김씨조선》으로 환생·재림한 꼴.

평양 것들에게 우남은 최대의 걸림돌. 《우남 악마화》 시작. 남한 좌파·중간파들은 그를 편을 들었다.

이영일 전 의원은 《악마화》 프레임이 우남에

게 씌워졌다고 《Hansun Brief》에서 분석했다. 다음은 내용 요약. [면접자 주]

《민족 분열의 원흉》은 정치공작

《민족 분열의 원흉》 프레임은 소·북의 계획적 심리전 책동에서 비롯됐다. 《국토분단의 모든 책임은 소련과 소련의 앞잡이 김일성에게 있음》이 이미 밝혀졌다.

그들은 《우남을 분단의 원흉으로 몰아세움으로써, 국토분단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공작》에 착수했다. 남한 내 동조 세력들이 《이승만 악마화》에 앞장섰다. 《반 이승만은 80년 걸쳐 계속된 대남 심리전 공작 주제》였다.

역대 정권들은 《북한이 걸어오는 역사 심리전》을 방관했다. 주사파들은 “대한민국은 태어났서는 안 될 나라”라고 했다.

미국, 부산 정치파동 촉발

7만여 명 미군은 우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9년 6월 철수했다. 김일성은 기습남침했다. 6.25. 3일 만에 수도 서울 함락. 낙동강 전선에 운명이 걸렸다. 유엔군 참전으로 전세 역전. 김일성은 중국 대련(大連)으로 파신.

통일 직전 중공 100만 대군이 쳐들어 왔다. 전세는 열지락뒤지락. 미군 사망자 3만을 넘으며 휴전선이 급등했다. 공화당의 아이젠하워는 휴전을 공약.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승만-아이젠하워의 대립 시작.

우남은 단독 복진론을 선언. 반공포로까지 석방했다. 미국은 우남을 거세하려 했다. 당시엔 대통령 간선제. 민주당이 다수당. 장면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려 했다. 유엔군 사령부-무초 미국대사가 이 계획을 수립. 한국군 일부 장성들도 가세했다고 알려졌다.

우남은 야당 의원들을 구금하고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켜 대통령에 당선됐다. 《대한민국 헌법을 이용한 미국의 우남 제거》는 실패로 끝났다. 이른바 《부산 정치파동》.

우남이 독재를 위해 그랬을까. 미국의 강제 휴전을 막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승만의 결단은 독재를 위한 음모가 아니라 호국을 위한 용단이었다.

4사 5입 개헌

휴전 직후, 우남은 《시장경제 조항을 보장하는 개헌》을 구상했다. 야당도 이의가 없었다.

문제는 부통령 선출제. 러닝메이트와 직선을 놓고 여야는 맞섰다. 자유당 136은 전체 의석 203의 3분의 2 무효 표로 1표 부족. 자유당은 4사 5입을 내세워 가결로 바뀐 선포.

《시장경제 조항 보장과 노령의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임기 제한을 없애고 부통령 직선제를 도입한다는 여야 합의》는 신문 머릿기사에서 사라졌다. 《4사 5입》이라는 조롱거리만 대서특필. 독재를 위한 개헌이었을까? 역사가가 정답은 없다지만 러닝메이트제로 개헌했다면, 부정선거도 4.19도 없었을 것.

3.15 부정선거

60년 3월 15일. 우남은 조병옥의 선거 직전 병사로 무투표 당선. 그러나 부통령 선거 패배의 경우, 고령의 우남 유고는 곧 정권교체. 자유당은 부정선거를 감행.

우남은 60년 4월 12일 국무회의에서 학생 시제가 바다에 떠윰랐다는 이야기의 경위를 물었다. 모든 국무 위원은 묵묵부답. 4.19 다 음날 우남-매카나기 미국 대사 면담에서 흥진 기 내부장관이 이실직고. 우남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부상 학생 위문 뒤 “불의를 보고 일

어설 줄 아는 젊은이를 가진 나라라는 든든하다”는 성명서를 내고 사임했다.

독재자 프레임은 모함

이승만은 민주주의가 접목되기 힘든 나라에 민주주의를 심었다. 의무교육으로 교육입국의 터를 닦았다. 농지개혁으로 경제 선진화 기초를 다졌다. 대미 외교로 유엔군을 6.25에 참전시켰다. 한미 동맹 체결로 호국의 토대를 마련했다.

역사에는 국민이 하야(下野) 하라고 해서 물러난 독재자는 없었다. 모든 독재자는 자기 목숨과 정권의 생명을 일찌시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결코 독재자라고 말할 수 없다. 《독재자 프레임》은 모함이다.

이영일 전 국회의원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협업으로 2025년 7월 19일 게재 되었습니다.

NO. 167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

뉴데일리 콘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